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자기애라는 사랑법의 위험한 경계

대상에가 맹목적으로 미화될 필요도 없다.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대상을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과 감정이므로, 그 자체로서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절대 조건이다. 문제는 대상이 아니고 애정의 방법과 정도 그리고 경계다.

과도한 자기애의 결말을 잘 보여 주는 이야기라 물가에서 불철에 피는 수선화 신화다. 수선화를 뜻하는 나르키소스는 강물의 요정이 낳은 아들로 너무나 아름답다. 자신의 얼굴만 보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는 운명이었다. 강의 요정은 아들이 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 이 덕분에 아들은 잘 자랐지만 자존심이 지나치게 센 탓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르키소스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말았다. 이날 이후 나르키소스는 자신과의 지독한 사랑에 빠졌고 물속에서 본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다가 그 물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다. 이 신화의 또 다른 결말은 자신에 대한 상사병이 너무나 깊어져서 먹지도 자지도 않고 호수만 들여다보다가 죽었다는 쪽이다. 나르키소스가 숨을 거둔 자

리에서 피어난 꽃이 바로 수선화라고 한다. 그리고 극단적인 자기 집착을 보여준 나르키소스에서 유래된 '나르시시즘'이 곧 자기애를 뜻한다.

수선화 신화에서 표현된 자기애는 끔찍하고 절망스럽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은 삶이 요구하는 절대 조건이 부정이고 거부이다. 누구나 세상 속에서 일정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예외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오직 자신을 향한 욕망과 감정을 있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저주다.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웃의 욕망을 욕망하는 삶도 결코 좋은 삶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세상 어느 누구와도 관계 맺지 못하고 나르키소스처럼 위험한 사랑의 '물'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은 더욱 불행한 일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자백'이니 '관중'이니 하는 표현들도 비슷한 의미다. 나르키소스 방식의 자기애는 자기 부정과 모순으로 가득한 실현 불가능한 사랑이다. '나'는 직접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상호 관계를 틀 속에서 무한히 변화하고 성장하며 새롭게 '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자기애 현상은 정도가 지나쳐서 경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다. 자기애가 더 나은 삶의 조건으로 강조되면서 내 것이라면 무엇이든 모든 것이 정당하고 귀하다는 태도다. 그래서 온갖 부정과 비리, 거짓이 넘쳐나도 잘못을 책임지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과도한 자기애가 사실상 깊은 자기혐오를 뒤집는 것이라서 점이다.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왜곡되어서 경계를 넘어서면 자기애로 위장된다는 의미에서 과도한 자기애는 자기혐오의 반증이다.

주체적 삶을 위한 자기애는 상생의 관계에 대한 파괴를 넘어서, 건설하는 힘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탁월한 힘의 가치는 '능히 할 수 있지만 애써 하지 않는 능력'을 통해서 빛을 발한다. 목적을 위해서 거짓과 위선이 사람들이 쉽게 택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는 힘이 진정한 힘이며 건설하는 능력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요청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파괴적 자기애 대신 애써 건설하며 성장하는 건강한 자기애이다.

기고

사람과 마을을 잇는 도시 재생



김택
동구구청장

·지원동에서도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고 내남·용산·선교 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며 건립 공사와 입주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주거 환경 정비에 힘입어 올해 초까지 계속 이어지던 인구 유출이 지난 4월 바닥을 찍고 드디어 반등세로 돌아섰다. 5월에만 460여 명이 증가했고 용산 지구 입주가 본격화되는 하반기에는 인구 10만 명 선을 곧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도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구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도시 경영을 새롭게 할 때가 됐다.

필자는 민선 7기 1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동구 발전을 위한 다음 세 가지 청사진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사람을 꽃피우는 '인문 도시'다. 동구는 광주의 뿌리이면서 문화 도시 광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배후 도시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 앞에서 '광주다움'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동구의 사명이자 의무다. 인문 도시는 지금의 광주를 역사 속에 빛나게 한 소중한 가치들을 기억하고 때 묻지 않은 눈으로 나와 내 주변을 성찰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다. 리인위미(里仁爲美), 마을은 어질고 인심 좋은 곳이 아름답다는 말이다. 필자는 동구가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기보다는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유구히 보존하고 여진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인문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

둘째는 더불어 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마을 복지'를 꿈꾼다. 민선 7기 동구 슬로건을 '이웃이 있는 마을'로 내걸었을 때 너무 소박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달랐다. 인구 10만 자치구에서 허황된 구호나 거대한 담론이 다 무슨 소용인가, 건강한 마을 생태계를 일구는 것이 최선의 복지라 믿었다. 그리고 지난 1년 많은 성과를 거뒀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기존 경로당과 달리 주민들에게 개방된 소동 경로당에서는 이웃끼리 둘러앉아 나눔 밥상이,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때때로 열려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을 찾아주었다.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들이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은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의 질은 더없이 깊어졌다. 무엇보다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복지 수혜 대신에 지역의 근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는 '주민 주도, 지역 공동체 중심' 실천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셋째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년에게 지역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광주의

원도심인 동구는 외부에서 바라볼 때 '노쇠한 도시'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의 꿈이 자라는 도시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현재 동구형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 행복 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다함께 돌봄 센터 유치, 재능 나눔 육성 등 다양한 유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청년 세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 생태 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청년 창업 허브 공간을 갖춘 동구 창업지원센터 개소, 청년 주거 사업 일환인 '동명하우스' 오픈, 청년 재정 할당제 시행,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청년 세대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청사진은 '사람과 마을을 잇는 도시 재생'이라는 말로 아우를 수 있다. 동구가 가진 역사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주민의 참여 속에 건강한 마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민선 7기 동구의 최종 목표다.

사람과 마을을 잇는 공동체형 도시 재생으로 광주의 종가집인 동구를 재건하고 광주다움이 있는 문화 도시의 상(像)을 세워 가는데 지역민들의 꾸준한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린다.

社說

정부 한전공대 적극 지원 의지 보여 주어야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논의할 범정부 지원위원회 회의가 돌연 연기됐다. 정부의 지원 규모를 둘러싼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간 이견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자칫 대학 설립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공대 범정부 지원위원회는 지난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정부 부처, 전남도, 한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이번 회의에선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법적 토대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등을 담은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을 협의할 방침이었는데 하루 전인 26일 갑자기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부처 간 조율할 사항이 있어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혀 정부 지원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원인이었을 암시했다. 우선 적자 누적으로 이사회 압박을 받고

있는 한전은 정부의 설립·운영 비용 지원에 기본계획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지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대학을 지향하는 한전공대 설립에는 7000억 원 안팎의 초기 비용과 연간 600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개교 이후 10년간 각각 100억 원씩 총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한전공대는 국정 과제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법적 토대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남도와 한전 및 지역 정치권도 정부 부처 간 이견을 허투루리 좁혀 대학 설립 절차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어제와 다른 내일' 기약한 북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오후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만났다.

'깜짝 일장'으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은 현직 미 정상으로는 다섯 번째다. 자유의집에서 단독회담을 가진 북미 정상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3차회담도 가졌다.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또한 사상 처음이다. 이 모두 정전 선언 이후 66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만남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외교사의 새 장을 열었다. 북한 땅을 밟은 첫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뒤 김 위원장의 안내로 MDL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5분 정도로 점쳐졌던 북미 정상회담은 당초 예상을 깨고 장장 53분간이나 이뤄졌다. 특히 회담을 마치고 자유의 집을 나서서 김정은 위원장은 더없이 밝은 표

정으로 웃으며 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며, 모종의 극적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랜 적대 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 말대로 역사적 순간이다. 우리가 만나는 것 자체가 역사적 순간"이라고 화답했다. 백악관으로 김 위원장을 초청하기도 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포괄적 합의가 목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말처럼 시간은 좀 더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해빙이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양상이다. 이들 정상들이 언제든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큰 성과다. 앞으로 실무회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반도에 '어제와는 다른 내일'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유세(wealth tax)를 부과하라고 미국 대선 주자들에게 최근 공식 제안했다.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크리스 휴스 등 미국 전체 1%의 부자 중에서도 상위 10분의 1에 해당하는 11개 가문의 19명이 이 제안을 담은 서한에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부유세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고 △미국의 경제적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미국인을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부유세가 △공정한 제도이며 △미국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애국적이라는 이유로 뒷받쳤다.

삶이 진행되면서 어떤 이유에나 다른 사람보다 많은 부와 명예,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된 이들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적' 그리고 이로 인한 '파멸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미국 억만장자들이 제안한 부유

세는, '사회적 나눔과 기여'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 보이는 시도'로 깎아내리기엔 그 명분과 진정성이 가깝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들은 서한 말미에 "우리들의 이익을 매우 좁게 정의한다면, 부유세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유세는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할 일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

부유세

부유세는 많은 재산을 가진 특정 상위 계층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부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제기돼 왔다. 하지만 재산의 해외 도피와 기업 투자의욕 상실, 이중과세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슈퍼 리치들이 서명한 이 서한이 황금탑을 한 치라도 더 높게 쌓아 올리기 위해 법규와 탈법·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사회 일부 기득권층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꿈꾸는 2040

저출산은 국가 재난이다



김병수
위원연구원·광산구청 인권팀장

최저치인 7만 명 정도에 불과해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후 소수의 젊은이들이 다수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이 발생할 전망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골목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70-80년대는 오히려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낳지 말자는 캠페인까지 펼칠 정도로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명목상 경제 지표나 생활 환경으로 보면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지만 그건 지표일 뿐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은 그때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저출산 관련 지표 현황을 보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어지는 추세 요인보다는 일자리에 따른 사회 경제적 양극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마디로 소득 격차에 따른 혼인과 출산의 격차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비율도 높고 출산율 또한 높다. 지난 10년 동안 100조 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출산율이 악화되니 이는 분명 정부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저출산 원인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보다는 처해있는 환경 개선에

만 집중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수많은 학자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는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를 주된 원인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자리 문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단기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한다. 소득의 격차는 선진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자산 역시 갈수록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한쪽에서 경제 성장을 외칠 때 다른 한쪽에서는 성장의 과실을 독점해 왔다는 것이다.

이렇듯 저출산의 원인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엉뚱한 방향으로 그 원인을 돌려 국고만 낭비해왔다. 아이를 낳고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그리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부모 세대가 올려놓은 천정부지의 부동산 값으로 집 한 채 장만하지 못 해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이다.

출산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자신들이 머문 터전의 환경이 극도로 나빠지면 출산을 포기하고 이동하는 게 생리인데 사람들이야 더 하지 않겠는가? 갈수록 이민자가 늘어나고 수도권으

로 인구가 집중되는 원인 또한 부의 권력이 소수와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저출산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2000년 초부터 발생해왔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20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저출산 문제를 마주해왔다는 결론이다.

이제 세계 1위의 최저 출산 국가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사회가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사망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진솔하게 마주하며 대응해야 한다. 재난 수준에 비유하는 건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산모의 출산 비용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대신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일자리 정책은 저출산 문제와 연동해 일원화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소득과 고용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고용 안정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牧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